



단체수의계약 폐지 3년 유예 촉구

중소기업인 여의도서 쫓기대회 가져



오는 12월 31일부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전국 300여개 중소기업 업종별 조합 및 연합회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8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단체수의 계약 폐지 3년 유예를 촉구하는 쫓기대회를 열었다.

15개 전국단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연합회회장단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단체수의계약제도3년유예추진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의 주도로 진행된 대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과 아직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영세중소기업인을 위해서라도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시기를 3년간 유예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시한부 존속 시켜달라” 한 목소리

공공기관이 필요물품을 조달청에 발주하고 조달청은 이를 지정된

1 권기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모습들 2 '근조! 대한민국중소기업 사망' 깃발 소각 퍼포먼스 3 단체수의계약 3년유예를 위한 서명운동 4 권기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의 모습들 5 이날 대회에는 이충원 이사장 등 5백여명의 인채인이 참여했다 6 김경식 공동대책위원장(한국콘크리트공업조합 연합회장)의 개회사 모습



관련 조합과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인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7년부터 전면 폐지가 결정된 상태. 이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기업들을 죽이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권기대회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1월 6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체하는 공공구매사업에 관한 시행령이 확정, 입법 예고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어 왔다.

대책위는 이날 권기대회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격 폐지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주어진 2년간의 유예기간은 중소기업들

이 준비를 하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특히 국내외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이 제도가 내년부터 당장 폐지된다면 영세 중소기업 대부분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단체수의계약을 대신해 실시될 신 공공구매제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이 제도의 내용을 모르고 있고, 공공기관들도 새로운 구매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제도의 효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들은 “3년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라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1항의 단서조항 “2007년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궤기대회중 대책위 집행부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우려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2개월 후 당장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영세중소기업 대부분의 퇴출·도산 및 협동조합들의 파산, 그리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심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책위는 “걱정했던 일들이 이미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된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가 이날 현장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의 경우 단체수의계약이 존속했던 2005년에는 226개 회원사가 716억원의 물량을 배정받았지만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고 경쟁입찰이 실시된 올해부터는 9월말 현재까지 1억이상 물량에 대해 30여개 회원사만이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서도 10여개 업체가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지난 2004년 말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된 한국조미료공업협동조합의 경우 1년 9개월간 회원사가 50%(40개 업체에서 20개 업체)로 줄었고 6개의 회원사가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시급”

이날 궤기대회의 명분이자 단체수의계약제도 3년 유예운동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워진 것은 신공공구매제도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고, 협동조

합의 활성화 방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대책위는 첫째,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등급별 입찰 제도는 그 범위가 막연하여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둘째, 영세소기업간 컨소시엄(소규모사업조합)구성시 낙찰에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될 것,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업종별 경쟁력을 강화해 대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리적 충돌 없이 무사히 끝나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은 산업별 전국 각 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들로 가득찼다. 이날 궤기대회에는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과 최창근 인쇄연합회 회장, 이충원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올라온 지방 조합 소속 500여명의 인쇄인들이 함께 참여했다. 대회장 주변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30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됐지만 우려했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주대철 대책위 간사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본행사는 대책위원단 소개에 이어 경과보고, 대회사, 격려사, 궤기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궤기선언문 낭독 후 중소기업인들은 폐업증을 내걸고 사업자등록증과 ‘근조! 대한민국중소기업 사망’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깃발을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폐회선언 뒤 대책위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날 오후 이현재 중소기업청장과 과천 소재 서울중기청에서 면담을 갖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당대표·정책위의장·산자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와 단체수의계약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제안할 것이며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청와대 앞 규탄대회는 및 대통령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